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인정보] 개인정보위, 2025년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안 공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본격 시행, 마이데이터 정책 확대에 따른 기업·기관 시사점은

2025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건강검진정보 등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보안체계 강화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컨설팅 및 데이터 처리 규제 전문가 이서형 변호사가 짚어본 시사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SKT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보보호는 단순한 CPO 지정으로 충분한가?

해킹 공격을 받은 SKT의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번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지며, 기업은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CPO의 경력 요건과 독립성이 강화되었고, 기업은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과징금, 소송, 평판 리스크까지 대비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사전 컨설팅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위, 2025년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시행에 대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기업의 이행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작성 항목을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동의 요건 구분, 항목 기재 유연성 확대, 고충처리 창구 명시, 모바일 환경 고려, 권리행사 절차 구체화, 맞춤형 광고 안내 강화 등 실질적 설명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이번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평가 대비가 필요합니다.

CASE STUDY
판결분석

중국에 고객 개인정보 넘긴 K사, A사, 과징금 총 83억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동의없이 넘긴 글로벌 빅테크 기업 M사 대상 최종 승소

취업 플랫폼 내 개인정보 해킹당해 과징금 부과받은 I사, 취소소송 패소

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W카드사, 과징금 134억원

PROPOSED BILL
최신 시행·발의 법안

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하는 개인정보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생체정보, 민감정보 유형으로 명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DOMESTIC·INTERNATIONAL POLICY TRENDS
국내외 정책 동향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는?

중국 기업,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처리방침 속속 개정 중

미국 2025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경쟁정책 및 데이터 현지화 '장벽' 지정

INSIGHTS
언론 속 대륜

쿠키뉴스



사망 후 시작되는 경영 위기, 중소기업 상속과 세무 대비 방안

한샘, 락앤락 등 중견기업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세전문 신종수 변호사가 기고문을 통해 상속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영주의 사전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뉴시스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 구속된 삼정기업, 회생 절차 3주째 관리인 못 찾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정기업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새 관리인 지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새 관리인 선임 절차에 진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 김원상 변호사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머니투데이



중국산 제품 소액 면세 폐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

미국의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취하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의 국내 산업의 주의점을 짚었습니다.

KBS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집단소송 진행,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본 법인은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공식 대응 방침입니다.

CONTACT

조영곤 대표변호사 T. 070-7510-2014

조상수 대표변호사 T. 070-5117-3709

정찬우 경영부대표변호사 T. 070-5221-2387

방인태 수석변호사 T. 070-7510-1822

이서형 수석변호사 T. 070-7510-2016

이은성 수석변호사 T. 070-5221-0865

법무법인(유한)대륜

대표번호 1800-7905

법률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